



[해설]  
강스템바이오텍  
직접교차분화기술 통해  
신경줄기세포 제작 성공  
03

이주열 한은총재 “경제변화 적절히 대응”

## 금리인하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했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거나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어왔던 이 총재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여기에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이 “통화 완화적 기조 가능성을 좀 진전해 말한 것 아닌가 이해한다”고 평가하면서 ‘금리 인하론’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인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내린 시점은 2016년 6월(연 1.25%)이다. 그 뒤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 포인트씩 올렸다.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하 이후 3년 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앞서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왔다. 이 총재는 불과 2주도 안 된 지난달 31일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되는데 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

“성장경로 불확실성 더 커져  
전개추이·영향 면밀히 점검”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 실려  
흥남기 부총리도 인하론 동조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에 대해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해석해 달라”며 말을 아꼈으나 금융시장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을 놓고 경제가 안 좋아질 경우 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흥남기부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총재의 기념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통화 완화적 기조 가능성을 좀 진전해 말한 것 아닌가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고무적으로 받아들

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1일에는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재가 짧은 기간 사이에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지난 4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의 관심은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인가에쏠린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오는 10월 17일과 11월 29일에 열린다. 따라서 금리 인하시기는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동학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수장들이 일제히 경기 진단이나 대응에 대해 일정한 틈을 맞췄다는 것은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로 간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희주 기자 hjs9@metroseoul.co.kr

야는 40여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 근로자당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하지만 정부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시장은 벼랑 끝에 섰다. 특히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민국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장하다 대한건아! 사상 첫 U20 결승

한국 선수들이 11일(이하 현지시간) 폴란드 루블린의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에콰도르와의 4강전을 승리로 마치며 환호하고 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대표팀은 전반 39분 최준의 결승골로 에콰도르를 1-0으로 꺾고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해 15일 우크라이나와 우승을 다투다.

/뉴스

Q 르포 | 中企人們에 공개한 삼성전자 광주 ‘그린시티’ 가보니

## 로봇이 수리하고 시스템이 자동 검증 0.01mm 오차도 없는 스마트공장의 메카

120명에 달하는 금형 설계 전문인력이 설계하면 3차원(3D) 설계 데이터에 따라 6000개 정도에 달하는 금형부품을 자동으로 만든다. 데이터화했기 때문에 도면은 따로 없다. 3D설계와 데이터화는 스마트공장의 핵심이다.

설계가 끝난 디자인이 실제 적용 가능 한지 검증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한다.

금형 한 세트를 완성하면 무게만 평균 20톤(t), 최대 47t 정도다. 금형 가공 기계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계가 고장나면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체크된다. 부품 교체 등 수리는 사람이 아닌 로봇이 한다.

기계는 머리카락 두께인 70マイ크론( $\mu\text{m}$ )보다 미세한 20  $\mu\text{m}$ 의 가공 정밀도를 갖고 있다. 금형 부품을 0.01mm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낸다. 합격률은 99%다. 평균 불량률 85%보다 높다. 금형 조립을 완전 자동화하지 못해 스마트공장 5단계에서 3.5세대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자



중소기업인들이 12일 삼성전자 ‘그린시티’에 있는 ‘정밀금형개발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동 조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여기까지 마무리되면 5세대 스마트공장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곳은 전체 면적만 8000평 정도로 아시아 최대인 삼성전자 광주공장내 금형공장(정밀금형개발센터)이다. 이 공장은 금형 설계와 일부 조립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인으로 24시간 돌아간다.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매년 100억원씩 5년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100억원을 더 들여 스마트공장 우수 인력 양성 등 대·중소기업 상생에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가 12일 중

소기업인들에게 광주공장을 공개하고 추가 노하우 전수에 나섰다.

이날 초청된 중소기업인만 500명 정도로 삼성전자가 생산 현장을 기업인들에게 대대적으로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30명에 가까운 국내 언론사 기자들도 동행했다.

삼성전자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1989년에 설립한 광주공장 ‘그린시티’에선 냉장고, 김치냉장고, 애어컨, 세탁기 등을 생산하며 백색가전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광주=배한님 기자 baha@

## 고용지표에 화들짝… 與 ‘中企 세액공제 연장’ 추진

김두관 의원, 3년 연장 개정안 발의  
업계, 최저임금 영향… “효과 없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고용시장 사정이 나빠지자 여당이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특례기간 연장에 나서는 모양새다. 세금 혜택 기간을 늘려 기업을 지원한다는 의도지만, 노동 정책 악순환으로 사실상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계류의안 분석 결과, 고용시장 악화가 두드러진 지난 4월부터 여

야는 40여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 근로자당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하지만 정부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시장은 벼랑 끝에 섰다. 특히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민국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자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124만4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신규 취업자 수는 석 달 만에 2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17만 1000명에 그쳤다.

이후 5월에 들어 취업자 수는 25만 9000명이 늘어 2732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바닥을 찍고 겨우 한 걸음 나아가는 모양새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한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만3000명 줄면서 14개월째 하락세다.

침체가 이어지자 김두관 더불어민주

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제도가 올해 12월 31일 끝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의 경우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는 법안을 냈다.

현행법상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

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 이후 2년간은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해준다.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 제도 역시 올해 말 종료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세금 감면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유지한다는 의도다.

업계는 여당의 이런 법안 발의에도 고용 시장 둔화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저임금 상승이 실업률 하락을 부추기고, 주 52시간 근무는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 하락까지 부추기기 때문에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